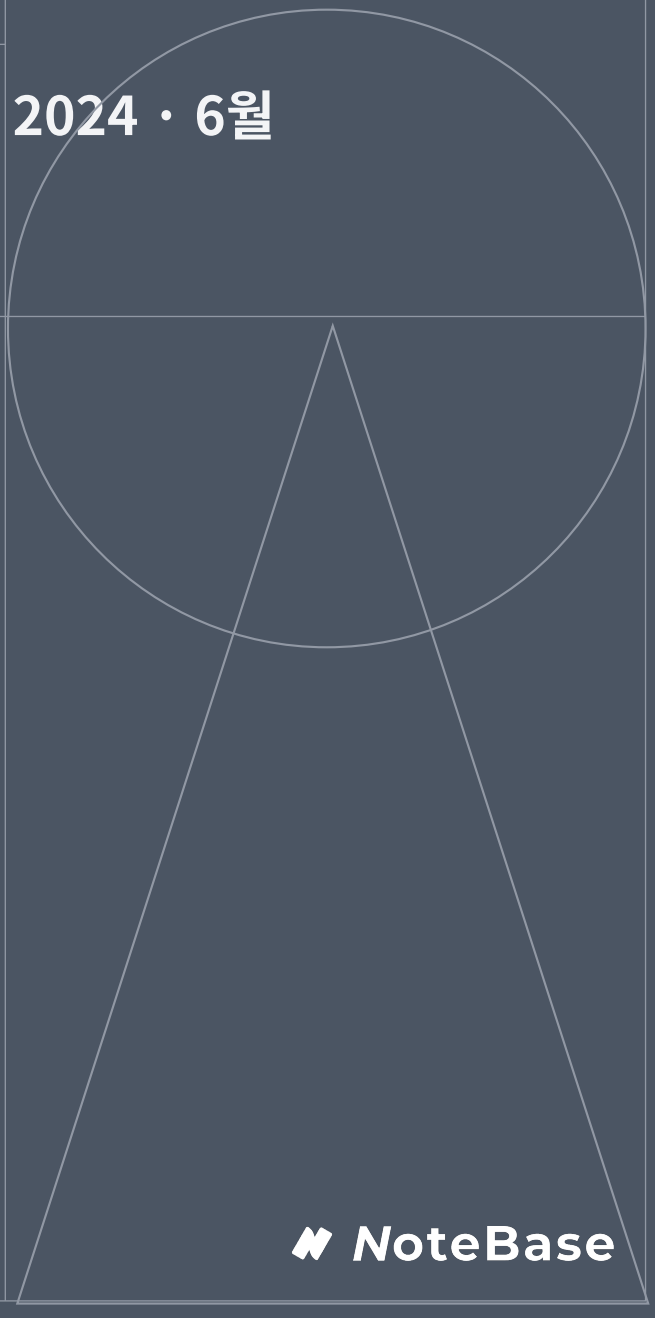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4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4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4 · 6월

문 1.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의 9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 처분으로는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수강 명령 등이 있다.

① 징역과 구류는 금고와 달리 노역이 부과된다.

② 금고와 구류는 구금 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된다.

③ 우리나라의 9가지 형벌 중 재산형은 벌금, 과료만이다.

④ 형벌과 보안 처분은 모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금고와 구류는 모두 의무적인 노역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며, **구금 기간**으로 구별된다.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이고,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형법 제67조·제68조에 따르면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지만, **금고와 구류에는 의무적인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역 여부로 구별되는 것은 징역과 금고·구류이다.

② O: 금고와 구류는 모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으로, 의무적인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다. 형법 제42조·제46조에 따르면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이며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인 반면,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므로 구금 기간의 장단으로 구별된다.

③ X: 재산형은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형벌로, **벌금·과료·몰수**가 해당한다. 벌금과 과료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고,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 등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므로 재산형에 포함된다.

④ X: 형벌은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이다. 이에 비해 보안 처분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근거하여 개선·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하려는 처분이므로, 둘을 모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할 수 없다.

NoteBase

문 2.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대중 매체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1920년대 신문 광고에서는 유명한 연예인을 내세워 담배가 날씬한 몸매 유지, 구강 살균,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여 흡연율을 몇 배로 높이고 담배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
•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마음에 드는 1인 미디어 제작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로 시청자가 현금 가치를 갖는 온라인 아이템을 선물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한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의 도를 넘은 자극적·선정적 콘텐츠가 양산되고 있다.

①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상업주의의 폐해를 초래한다.
②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를 양산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③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약화시킨다.
④ 이질적인 문화를 확산시켜 전통문화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담배 판매를 늘리려는 광고와 온라인 아이템을 받으려는 자극적 콘텐츠는 모두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다. 대중 매체가 정보의 질이나 사회적 책임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상업주의의 폐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상업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이다. 첫 사례에서는 연예인을 내세워 담배의 효능을 선전함으로써 소비를 자극하고 담배 시장을 확대했다. 둘째 사례에서는 현금 가치를 갖는 온라인 아이템을 받으려고 자극적·선정적 콘텐츠를 제작한다. 두 사례 모두 판매나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 매체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② X: 주류 문화의 가치와 규범에 저항하는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 사례에는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극적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반문화라고 볼 수 없으며, 여기서 부각된 문제는 수익을 얻기 위해 광고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상업주의이다.

③ X: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의 약화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권력 감시 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두 사례에는 **정치적 관심이나 권력 비판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담배 소비를 유도하고 후원 아이템을 얻으려는 행위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문제로 설명해야 한다.

④ X: 전통문화의 주체성과 정체성 약화는 외부 문화의 유입·수용 과정에서 자기 문화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두 사례에는 **이질적인 문화의 확산이나 전통문화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신문과 1인 미디어라는 매체의 차이보다, 매체를 통해 수익을 늘리려는 공통된 목적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3. <보기>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효력을 가진다.
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경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ㄷ.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ㄹ. 헌법은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조직하고, 정치권력의 행사 절차와 한계를 정한다.
국가권력을 헌법에 구속하여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수준의 효력'은 '헌법이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ㄴ. X: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그 효력을 없앤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으로 다투며, 당사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법률 자체가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도 가능하므로, 권리구제형으로는 법률을 전혀 다툴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ㄷ. O: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기관의 구성과 권한, 운영 방식을 정한다. 예를 들어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ㄹ. O: 헌법은 정치권력을 누가 어떤 방법과 절차로 행사하는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국가 기관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권력 행사의 근거와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옳은 보기는 ㄷ과 ㄹ이며, 이를 함께 고른 조합은 ④이다.

NoteBase

문 4. <보기 1>의 현대 정치 과정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는 대중교통비는 인상하되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할 수 있다.

<보기 2>
ㄱ. 현대 민주 정치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투입에 해당한다.
ㄷ. 행정부가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환류에 해당한다.
ㄹ.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산출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요금 인상 요구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모두 정책 결정 기구에 의견을 전달하는 **투입**이다. 행정부가 요구를 조정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산출**에 해당하며, 정책 시행 결과가 다시 정치 과정에 반영되는 환류와 구별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행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조정하고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사례에서도 운송 사업자와 이용자의 상반된 요구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요금 정책을 결정한다.

ㄴ. O: 투입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나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되는 과정이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인상 반대는 교통비 부담을 늘리지 말라는 **요구의 표출**이므로 투입에 해당한다.

ㄷ. X: 행정부가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요구를 조정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산출**에 해당한다. 환류는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나 반응이 새로운 요구·지지 등으로 다시 정치 과정에 반영되는 과정이다. 상반된 요구를 조정한다는 사실만으로 환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ㄹ. X: 운송 사업자가 행정부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전달하는 **투입**이다. 산출은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이다.

옳은 보기는 ㄱ, ㄴ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5. <보기>는 세대 내 이동을 이동 방향과 이동 원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세대 내 하강 이동	세대 내 상승 이동
개인적 이동	(가)	(나)
구조적 이동	(다)	(라)

① (가) — 노비였던 사람이 신분 제도의 철폐로 인해 노비에서 해방되어 최하층에서 벗어났다.

② (나) — 회사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인사부 평사원에서 홍보부 이사로 승진하였다.

③ (다) —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 자수성가하여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④ (라) — 부유했던 사람이 혁명으로 인해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업적을 인정받아 평사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것은 개인의 성취로 지위가 높아진 **개인적 상승 이동**이다.
인사부에서 홍보부로 부서가 바뀌었더라도 직급이 높아졌으므로 수평 이동으로 보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세대 내 이동은 한 개인의 생애에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지위가 높아지면 상승 이동, 낮아지면 하강 이동이다. 이동 원인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등에 있으면 개인적 이동,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의 변화에 있으면 구조적 이동이다. 표에서 (가)는 개인적 하강 이동, (나)는 개인적 상승 이동, (다)는 구조적 하강 이동, (라)는 구조적 상승 이동에 해당한다.

① X: 신분 제도의 철폐로 노비에서 해방된 것은 **구조적 상승 이동**이다.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사회 제도의 변화로 지위가 높아졌으므로 (가)가 아니라 (라)에 해당한다.

② O: 업적을 인정받아 평사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것은 **개인적 상승 이동**이므로 (나)에 해당한다. 개인의 성취가 이동 원인이며, 부서 변경과 함께 직급도 높아졌으므로 단순한 수평 이동이 아니다.

③ X: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 자수성가하여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된 것은 **개인적 상승 이동**이다. 본인의 성취로 지위가 높아졌으므로 (다)가 아니라 (나)에 해당한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배경이 있어도, 여기서는 부모와 자녀의 지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 중 지위 변화를 설명한다.

④ X: 혁명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장 노동자가 된 것은 **구조적 하강 이동**이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지위가 낮아졌으므로 (라)가 아니라 (다)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보기 1>의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갑(甲): 근로 계약서 작성이나 일을 할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나요?
을(乙, 28세): 예. 저는 _____(가)_____

<보기 2>
ㄱ. 두 달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ㄴ. 사용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10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했습니다.
ㄷ. 근로 계약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ㄹ.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정당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전보**를 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각 보기의 O/X는 사용자의 노동 관련 법 위반 사실을 말하는 내용으로 적절한지를 나타낸다.

ㄱ. X: 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 요건을 지킨 사례이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원칙적으로 해고일보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고,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두 달 전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렸다면 **30일 전 예고와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ㄴ. X: 을은 28세의 성인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사용자와 합의하여 1주 10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를 한 것은 이 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제시된 내용은 연장 근로 제한 위반이 아니다.

ㄷ. O: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로 계약의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인 **단결권을 침해**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고용 조건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다. 근로자가 계약서에 동의했더라도 이 금지를 피할 수 없다.

ㄹ. O: 정당한 파업은 근로자가 근로 조건에 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는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사례의 지방 발령은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에 해당하는 보기는 ㄷ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7. <보기 1>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A국을 여행한 갑(甲)은 처음 식당에 갔을 때 몹시 당황했다. 식사 후에 영수증을 보니 봉사료를 손님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국 사람들은 음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봉사료로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보기 2>
ㄱ.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ㄴ.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ㄷ.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바탕이 됨을 보여준다.
ㄹ.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하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A국 사람들이 봉사료 선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공유된 문화는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기준을 제공하고,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게 하여 **원활한 상호 작용**을 돕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문화의 공유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생활 양식과 의미를 지니는 속성이다. A국 사람들에게 봉사료 선택은 자연스러운 관행이므로, 개인의 판단과 행동도 이러한 **공유된 기준의 영향**을 받는다. 문화가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는 것은 반드시 강제로 따르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여기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ㄴ. X: 여러 문화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것은 **문화의 전체성**에 관한 설명이다. 전체성을 보여 주려면 문화 요소들 사이의 연관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 이 사례는 봉사료 관행을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므로, 부각되는 속성은 공유성이다.

ㄷ. O: 문화를 공유하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하고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A국 사람들은 봉사료를 선택하는 관행을 공통으로 받아들이므로, 식사 후 봉사료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며 원활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다. 갑이 처음에 당황한 것은 이 관행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ㄹ. X: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의 형태·내용·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문화의 변동성**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생활 양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사례에는 봉사료 관행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고, 그 관행에 대한 갑과 A국 사람들의 반응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사례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을 적절하게 설명한 보기는 ㄱ과 ㄷ이며, 이는 ②의 조합이다.

NoteBase

문 8. <보기>의 A~F 중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유치원에 다니는 A(6세)는 엄마 B(35세)가 청소하는 틈을 타 아파트 10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창밖으로 던졌다. 이 화분이 아파트 화단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C의 머리에 맞아 C는 6주간 치료를 받았다.
· D(34세)는 E(46세)가 운영하는 전자 제품 대리점의 배달 사원으로 고객 F가 구매한 텔레비전을 배달하였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텔레비전을 넘어뜨렸고, 옆에 서 있던 F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골절되어 F는 4주간 치료를 받았다.

① B, D
② A, B, D
③ A, D, E
④ B, D, E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6세 유아 A는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어머니 B가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D는 자신의 과실로 F를 다치게 한 책임을 지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고용주 E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A: 배상 책임 없음.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판단할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이 사례의 6세 유아 A는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화분을 던져 C를 다치게 했어도 스스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B: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어머니 B는 책임능력이 없는 A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A가 C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감독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소 중에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C: 배상 책임 없음. 화분에 머리를 맞아 다친 피해자이다. 제시된 사실에는 C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정이 없으므로,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고르지 않는다.

D: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성인 D는 텔레비전을 설치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F를 다치게 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F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고용주에게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D 자신의 책임은 남는다.

E: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D는 E가 고용한 배달 사원이고, 사고는 텔레비전을 배달·설치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E도 F에게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D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그러한 주의를 기울여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F: 배상 책임 없음. D의 실수로 발가락이 골절된 피해자이다. 텔레비전을 구매한 고객이라는 이유로 D나 E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B, D, E이며, 이 조합은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9.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기본권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과 ㉡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은 국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은 실질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라는 성격을 지닌다.
② ㉡은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 주권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③ ㉠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④ ㉡은 ㉠과 달리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을 강조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서 강조되었으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선지별 해설

㉠은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는 자유권이고, ㉡은 실질적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권이다.

① X: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재판청구권처럼 기본권을 실현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권리이다. ㉠인 자유권은 자유로운 생활 자체를 보장받는 실체적 권리이다.

② X: ㉡인 사회권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 국가 원리**와 직접 관련된다. 국민 주권주의와 직접 관련되는 기본권은 국민이 선거 등을 통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이다.

③ O: ㉠인 자유권은 절대 왕정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서 강조되었다.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④ X: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인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인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NoteBase

문 10.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국과 을(乙)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표는 국가별 계층 구성 비율의 비를 나타낸다.

구분(비율)	갑국	을국
상층 : 중층 : 하층	1 : 2 : 1	2 : 1 : 7

① 갑국은 을국에 비해 상층의 비율이 높다.

② 중층의 비율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③ 을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④ 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표의 비는 국가마다 합이 다르므로 **각국의 비의 합을 기준**으로 구성 비율을 구해야 한다. 상층 비율은 갑국이 **25%**, 을국이 **20%**이므로 갑국이 더 높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갑국의 비의 합은 1 + 2 + 1 = 4, 을국은 2 + 1 + 7 = 10이다. 상층 비율은 갑국이 $\frac{1}{4} \times 100 = 25\%$, 을국이 $\frac{2}{10} \times 100 = 20\%$이다. 따라서 비에 표시된 상층의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각국 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야 하며, 갑국의 상층 비율이 더 높다.

② X: 중층 비율은 갑국이 $\frac{2}{4} \times 100 = 50\%$, 을국이 $\frac{1}{10} \times 100 = 10\%$이다. $50 \div 10 = 5$이므로 갑국의 중층 비율은 을국의 **2배가 아니라 5배**이다.

③ X: 을국의 상층·중층·하층 비율은 각각 20%·10%·70%이다. 하층이 가장 많지만, 중층이 상층보다도 적으므로 **모래시계형**에 해당한다. 피라미드형은 하층 > 중층 > 상층 순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을국의 구조와 다르다.

④ X: 갑국의 상층·중층·하층 비율은 각각 25%·50%·25%로, 중층 비율이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형이다. 을국은 중층 비율이 가장 낮은 모래시계형으로,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이 나타나기 쉽다. 중층이 두터우면 상층과 하층 사이의 이해 대립을 완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갑국의 계층 구조가 을국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NoteBase

문 11. <보기>는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를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외환 수취	외환 지급
상품 수지		(가)
서비스 수지	(나)	
본원 소득 수지	(다)	
이전 소득 수지		(라)

① (가) -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휴대전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② (나) - 우리나라 기업이 상표권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

③ (다) -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

④ (라) -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외국 주식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은 투자 대가로 얻은 소득이므로 **본원 소득 수지의 외환 수취**에 해당한다.
주식을 사는 투자 자체와 그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표의 (가)는 상품 수지의 외환 지급 항목이다. 휴대전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은 상품 수지에 속하지만 **외환 수취**에 해당한다. (가)에는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금이 들어가야 한다.

② X: 표의 (나)는 서비스 수지의 외환 수취 항목이다. 상표권 자체를 외국 기업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은 **자본 수지**에 기록한다. 상표권의 소유권을 넘기는 매각 대금과 달리, 외국 기업이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의 외환 수취에 해당한다.

③ O: 표의 (다)는 본원 소득 수지의 외환 수취 항목이다. 본원 소득 수지는 노동이나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임금·이자·배당 등의 소득 거래를 기록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주식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은 **투자 소득의 수취**이므로 (다)에 해당한다.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 자체는 금융 계정에 기록한다.

④ X: 표의 (라)는 이전 소득 수지의 외환 지급 항목이다. 이전 소득 수지는 **대가 없이 주고받는** 무상 원조나 증여성 송금 등을 기록한다.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은 해외 직접 투자로서 금융 계정에 기록한다. (라)에는 외국에 무상 원조를 제공하고 지급한 금액 등이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보기>는 A재~D재를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A재	B재	C재	D재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가?	예	예	아니요	아니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는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① B재의 사례로는 '막히는 무료도로'가 있다.

②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C재의 속성을 지닌다.

③ C재와 같은 특성을 지닌 재화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한다.

④ D재와 달리 A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C재는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줄이는 **공유 자원**이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이용하면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첫째 행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배제성', 둘째 행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줄이는 '경합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A재는 두 특성을 모두 지닌 사적 재화, B재는 배제성만 지닌 클럽재, C재는 경합성만 지닌 공유 자원, D재는 두 특성이 모두 없는 공공재이다.

① X: '막히는 무료도로'는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이용을 막지 않으므로 비배제적이며, 혼잡 때문에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므로 경합적이다. 따라서 B재가 아니라 **C재의 사례**이다. B재의 사례로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이용을 막을 수 있고 혼잡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유료도로가 있다.

② X: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따라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지닌 A재**의 속성을 지닌다. C재는 배제성이 없는 공유 자원이다.

③ O: C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 공유 자원이다.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려워 누구나 자원을 이용하려 하지만, 한 사람의 이용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줄인다. 이때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량을 늘리면 **과도한 이용으로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④ X: 무임승차 문제는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도 재화의 혜택을 누리려는 현상으로, 비배제적인 공공재인 **D재에서 발생**한다. A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 문제는 A재의 특성이 아니다.

NoteBase

문 13. <보기>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 ㉠ 명시적 비용 + ㉡ 암묵적 비용

① (가)는 매몰비용이다.
② ㉠은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가치이다.
③ ㉡은 대안을 선택할 때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다.
④ 순편익은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득에 (가)를 뺀 값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기회비용**이다. 순편익은 선택으로 얻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에는 실제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과 선택 때문에 포기하는 암묵적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앞으로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리적 선택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② X: ㉠은 명시적 비용으로, 대안을 선택할 때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이다.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선택 때문에 포기한 가치는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③ X: ㉡은 암묵적 비용으로, 실제로 돈을 지출하지는 않지만 선택 때문에 포기하는 가치이다. 포기한 대안이 여러 개라면 그중 **가장 가치가 큰 대안**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지출하는 비용은 ㉠인 명시적 비용이다.

④ O: 순편익은 선택으로 얻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다. (가)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기회비용이므로, 편익에서 (가)를 빼면 순편익이 된다. 실제 지출액뿐 아니라 **포기한 가치까지 차감**해야 그 선택으로 얻는 순수한 이득을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문 14. <보기 1>에 나타난 조직 운영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보기 1>
A는 장기에 비유할 수 있다. 장기의 말들은 각자의 위치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또한 차, 포, 마, 상, 졸 등이 궁(임금)을 위해 존재하며, 궁을 필두로 각 말들이 수직 계층화되어 있다. 반면, B는 바둑에 비유할 수 있다. 바둑에는 규칙이 있지만 각 돌은 필요한 경우에 아무 곳에나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바둑에서는 돌 간에 위계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기 2>
ㄱ.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A < B
ㄴ. 조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 A > B
ㄷ. 구성원 개인별 업무의 세분화 정도: A < B
ㄹ.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 중시 정도: A > 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A는 역할과 위계가 고정된 관료제이고, B는 조직 운영이 유연한 탈관료제이다. 탈관료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관료제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므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A는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궁을 중심으로 수직적 위계를 이루므로 관료제이다. B는 위계 서열 없이 필요에 따라 자리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관료제이다.

ㄱ. O: 탈관료제는 상황에 따라 구성원의 역할과 조직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의사 결정을 분산하므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쉽다. 고정된 역할과 위계적 절차를 중시하는 관료제보다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므로 A < B이다.

ㄴ. O: 관료제는 구성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하고, **규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누가 업무를 맡아도 처리 방식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쉬우므로 조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은 A > B이다.

ㄷ. X: 구성원 개인별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자 전문적인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관료제의 분업과 전문화**이다. 탈관료제는 고정된 업무 경계를 완화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므로, 업무의 세분화 정도는 A < B가 아니라 A > B이다.

ㄹ. X: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을 더 중시하는 것은 **탈관료제**이다. 관료제는 상대적으로 근속 연수 등에 따른 연공서열을, 탈관료제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므로 해당 보상의 중시 정도는 A > B가 아니라 A < B이다.

옳은 보기는 ㄱ, ㄴ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월 ○일 대통령 일정

10:00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주 임무로 하는 A의 장에게 임명장 수여
13:00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B에 참석하여 주요 국정 현안 협의

① A의 기능에는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가 있다.

② A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B의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④ 국회의원은 B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B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이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의 10:00 일정에서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A는 감사원이다. 13:00 일정에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B는 국무회의이다.

① O: 감사원은 직무 감찰뿐 아니라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도 담당한다. 결산 검사는 한 해 동안 국가가 거둔 수입과 지출한 금액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다. 헌법 제97조와 제99조에 따라 감사원은 매년 결산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O: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X: 헌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다. 따라서 'B의 의장은 국무총리이다'는 'B의 의장은 대통령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헌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NoteBase

문 16. <보기>는 질문 (가)~(다)를 통해 시대별 민주주의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중 하나이다.)

<보기>

구분	A	B	C
(가)	예	예	아니요
(나)	아니요	아니요	예
(다)	㉠	예	㉡

① (가)에는 '직접 민주제를 바탕으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② (나)에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기초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③ A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라면 (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습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④ (다)에 '성별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합니까?'가 들어가고 ㉠이 '아니요'라면 ㉡은 '예'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현대 민주주의는 **성별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지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여성이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다)에 제시된 질문에서 ㉠이 '아니요'이면 A는 현대 민주주의이고, 나머지 C의 응답인 ㉡은 '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직접 민주제는 시민이 대표자를 거치지 않고 국가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제를 바탕으로 했지만, 근대와 현대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만 '예'라고 답하므로, 두 유형이 '예'인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X: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근대와 현대 민주주의 모두** 국민주권의 원리를 기초로 하므로, 적어도 두 유형의 응답이 '예'여야 한다. C만 '예'이고 A와 B가 '아니요'인 (나)의 응답과 맞지 않는다.

③ X: 권력분립은 국가 권력을 나누어 담당하게 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는 원리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으며, **근대적 권력분립 원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 기반으로 삼지는 않았다. 반면 근대와 현대 민주주의는 권력분립을 기초로 한다. A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라면 B와 C는 근대와 현대 민주주의이므로 둘 다 '예'여야 하는데, 표에서 B는 '아니요'이므로 제시된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④ O: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성인 남성 시민에게 정치 참여가 허용되고 여성은 배제되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도 초기에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 민주주의는 보통 선거가 확립되어 **성별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가 제시된 질문이고 ㉠이 '아니요'라면 A는 현대 민주주의이다. B와 C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중 하나씩이므로 모두 '예'라고 답하며, ㉡도 '예'이다.

NoteBase

문 17. <보기>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연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연구 절차
A	연구 주제 선정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해석 → 결론 도출
B	연구 주제 선정 → ㉠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① A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다.

② ㉠에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③ A는 B에 비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다.

④ B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고 본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은 연구 주제를 정한 뒤 자료 수집에 앞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가설은 연구 문제에 대해 제시하는 잠정적인 결론으로, 이후 수집한 자료로 검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A는 자료를 해석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질적 연구이고, B는 가설을 세운 뒤 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하는 양적 연구이다. B의 ㉠에는 '가설 설정'이 들어간다.

① X: A인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다. 사회·문화 현상에는 인간의 주관적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자연 현상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 방법론적 일원론은 B인 양적 연구의 전제이다.

② O: ㉠의 가설 설정에서는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자료로 확인된 결론이 아니며, 이후 연구 설계와 자료 수집·분석을 거쳐 가설을 검증한다.

③ X: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A인 질적 연구보다 **B인 양적 연구가 더 용이하다**. 양적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과 통계 분석 등을 활용하여 여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성을 찾는다. 질적 연구는 개별 사례의 맥락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결과를 다른 사례에 일반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④ X: B인 양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며,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하지 않는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을 중시한다. 연구자가 대상과 상호 작용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므로 대상과 분리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A인 질적 연구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____는 A당 의원 19명이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국회 의장과 국회 기획 재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각하 이유이다. 즉, 국회법 개정 행위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 쟁의 심판의 피청구인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한 재판관 의견은 각하(5명), 기각(2명), 인용(2명)으로 나뉘었다.

① 장은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②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 의결을 한다.

③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④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을 담당하는 (가)는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여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헌법재판소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권한이 있는지 또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보기에서 국회의원들이 심의·의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맡은 기관이 판단의 단서이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① X: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4항). 선지는 동의하는 주체와 임명하는 주체를 잘못 제시했다. 대통령의 동의를 받는 것도,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다.

② X: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 권한**이다(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건을 심판하여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담당 기관을 구별해야 한다.

③ O: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므로,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는 설명이 맞는다(헌법 제8조 제4항, 제111조 제1항 제3호).

④ X: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은 **대법원**이다(헌법 제107조 제2항).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을 받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과 구별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NoteBase

문 19. <보기>는 실업의 유형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중 하나이다.)

<보기>

	A	B	C
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불황으로 인한 노동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실업입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① A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A에서 나타나는 실업의 유형은 경기가 호황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

③ B, C와 달리 A의 증가는 실업률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④ C는 직업 탐색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A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이다. 일자리 탐색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경기가 호황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A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마찰적 실업이다. B는 불황에 따른 노동 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경기적 실업이다. C는 자발적 실업도, 불황에 따른 실업도 아니므로 구조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나 기술의 변화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과 구직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특성이 맞지 않아 발생한다.

① X: 경기 부양책은 소비·투자 등 총수요를 늘려 기업의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므로 **경기적 실업인 B**를 줄이는 데 적합하다. A는 구직자와 일자리 사이의 정보 부족이나 탐색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발생하므로, 취업 정보 제공과 직업 알선 등이 적합한 대책이다.

② O: A는 이직하거나 새로 노동 시장에 진입한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이다. **호황으로 일자리가 많아도 탐색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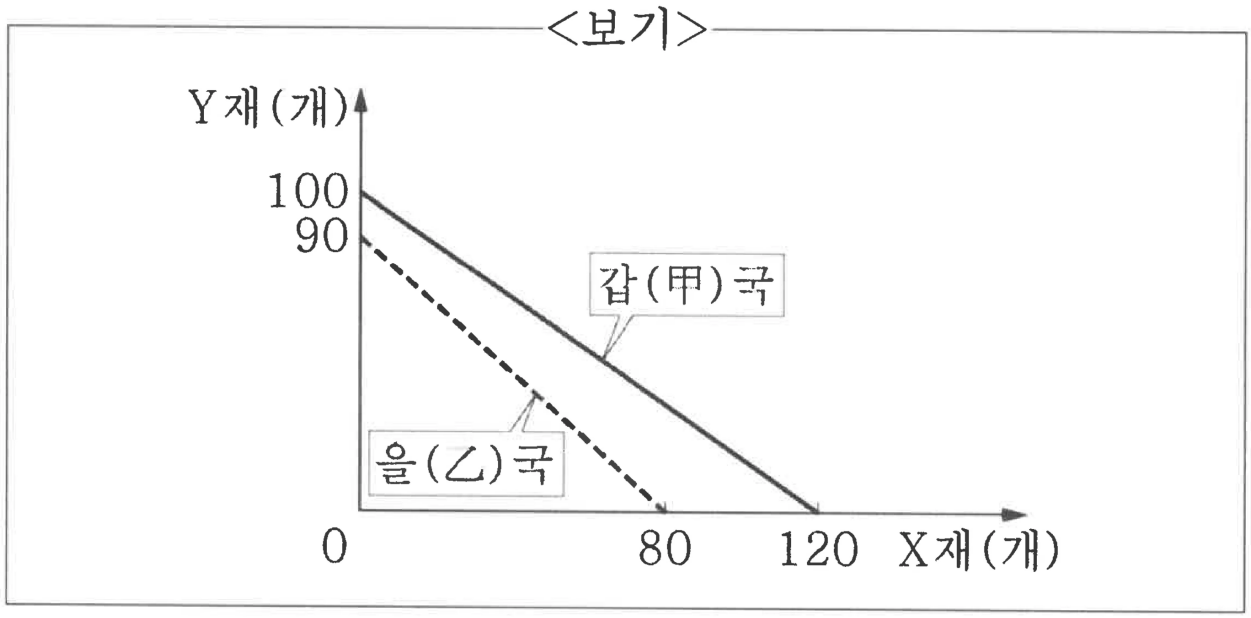
③ X: **마찰적 실업자도 실업률에 포함**된다. 자발적으로 이전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업자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A의 증가도 B나 C의 증가처럼 실업률을 상승시킨다.

④ X: 직업 탐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마찰적 실업인 A**이다. C는 구조적 실업이므로, 단순히 일자리 정보를 찾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새로운 노동 수요에 맞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NoteBase

문 20. <보기>는 X재와 Y재만 생산하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과 을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양 국가 간에만 교역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교역 전 갑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6/5개이다.

② 교역 전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③ 을국은 X재 생산에 절대 열위를, Y재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④ 교역을 위해 갑국은 X재를 특화하고 을국은 Y재를 특화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비교 우위는 다른 나라보다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를 생산할 때 성립한다. 갑국은 X재의 기회비용이 더 낮고 을국은 Y재의 기회비용이 더 낮으므로, 각각 그 재화에 특화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로축은 X재, 세로축은 Y재의 생산량이며 단위는 개이다. 실선인 갑국의 최대 생산량은 X재 120개 또는 Y재 100개이고, 점선인 을국은 X재 80개 또는 Y재 90개이다. 두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므로 한 재화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인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따라서 한 재화 1개의 기회비용은 다른 재화의 최대 생산량을 그 재화의 최대 생산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① X: 갑국은 X재 120개를 생산하기 위해 Y재 100개를 포기한다. 따라서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Y재 $\frac{100}{120} = \frac{5}{6}$개이다. 선지의 Y재 6/5개는 **갑국의 Y재 1개 생산에 필요한 기회비용인 X재의 수량**과 혼동한 것이다.

② X: Y재 1개의 기회비용은 갑국에서 X재 $\frac{120}{100} = \frac{6}{5}$개이고, 을국에서 X재 $\frac{80}{90} = \frac{8}{9}$개이다. $\frac{6}{5} > \frac{8}{9}$이므로 Y재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③ X: 절대 우위는 생산 능력의 우위를,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의 우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래프에서 을국의 X재 최대 생산량 80개는 갑국의 120개보다 적고, Y재 최대 생산량 90개도 갑국의 100개보다 적다. 제시된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을국은 **두 재화 모두 절대 열위**에 있다. 을국이 Y재에 갖는 것은 비교 우위이다.

④ O: 비교 우위 재화는 상대국보다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이다.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갑국에서 Y재 $\frac{5}{6}$개, 을국에서 Y재 $\frac{90}{80} = \frac{9}{8}$개이므로 갑국이 X재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Y재 1개의 기회비용은 을국의 X재 $\frac{8}{9}$개가 갑국의 X재 $\frac{6}{5}$개보다 적으므로 을국이 Y재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갑국은 X재에, 을국은 Y재에 특화**하여 교역한다.

NoteBase